

국제 개발재원 논의 변화와 개발금융에 관한 시민사회 토론회 기록

기록: 윤지영(ODA Watch)

I. 행사명: 국제 개발재원 논의 변화와 개발금융에 관한 시민사회 토론회

- 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주관: ODA Watch, 참여연대, 월드비전, 한국투명성기구

II.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4년 12월 23일(화), 오전 10시~ 오후 12시 3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람드리홀

III. 프로그램

[발표]

1. OECD DAC 고위각료급회의 결과와 시사점: 이소리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사무관
2. 개발금융의 논의 동향 소개: 문기영 기재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 사무관
3. 국제사회 개발재원 논의 흐름과 최근 개발금융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민경일 참여연대 실행위원

[토론]

1. 국내 ODA 정책에 대한 합의: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학원 교수
2.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3. 시민사회의 과제와 주요 쟁점: 이태주 ODA Watch 대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IV. 논의 내용

1. 사회자 토론회 취지 및 배경 설명(김정인 월드비전 옹호사업팀 대리)

- 2014년 KoFID 원조투명성 분과 마지막 활동으로 마련한 자리
- 원조투명성분과(ODA Watch, 참여연대, 투명성기구, 월드비전)는 2013년부터 한국 ODA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정책옹호활동을 해옴
- 최근 한국 ODA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유상원조 비율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쉽게도 유상원조에 대한 논의와 정보가 널리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원조투명성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유상원조 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금융 확대 방안 논의 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개발재원 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기획함

2. 발표

1) OECD DAC 고위각료급회의 결과와 시사점

- 이소리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사무관

- 2014년 12월 15일~16일 양일간 OECD DAC HLM이 열렸음. HLM은 개발협력 관련 주요사항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임
- 2012년에 ODA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한 차례 있었고 다음 HLM에서 합의할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 회의가 열렸음. 정부 대표단으로 다녀옴.
 - ODA 통계 측정 관련 향후 국제개발협력 체제에 변화를 일으킬 내용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2012년 HLM 주요 합의 사항

- ◇ **총공적개발지원(TO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체제 제안서 마련
 - * 2014년 코뮤니케에는 SDGs 보고서 등 국제논의를 반영,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Sustainable**'이 추가
- ◇ **공여국의 노력과 수혜국의 혜택을 모두 측정하는 방안** 마련
- ◇ 신규 개발재원 측정 체제 마련으로 인한 **ODA 개념 현대화 필요 여부** 확인
- ◇ 양허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 비추어 **ODA 차관을 보고함에 있어 아래 원칙 준수**
 - ①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를 고려할 것, ② ODA 총액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말 것, ③ 다자개발금융기구에서 정의된 양허성 측정 기준과 일치할 것, ④ ODA 정의에 충실을 기하고, ODA로 인정되는 차관의 해석을 명확히 할 것, ⑤ ODA 차관 시행계획상의 상업적 논리를 배제할 것 (차관 원리금 회수시 여타 용도가 아닌 개발재원에 재투자될 것)
- ◇ **이른 시일 내(2015년 한) 양허성에 대한 명확한 양적 정의 수립**

① 2014년 OECD DAC HLM 회의 배경 설명(자료집 1p)

- MDG 달성 시한 2015년 만료, 새로운 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 개발재원이며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총회 개최 예정
 - 아디스아바바 총회를 앞두고 현재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의 큰 화두는 많은 개발재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모색
- 개발재원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원, 국내 자원 동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ODA의 정의

- 개도국 복리발전과 증진에 기여하고 공적 기관으로부터 재원이 기인해야 함
- 유상원조의 경우 양허성이 높고 시장재원보다 조건이 우호적이어야 함, 증여율이 25% 이상일때만 ODA로 인정함

- DAC에서 1972년도에 ODA 개념 정의가 된 이후에 변화가 없었음.
 - 그동안 ODA의 성격이 양허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견해가 달랐고 합의된 내용이 없었음
 - 증여율 25% 충족하면 ODA로 인정되므로 어떤 나라는 시장금리와 별 반 다르지 않는 금리로 제공해도 ODA로 인정받고, 어떤 나라는 증여율을 높여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유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나라별로 제공 조건이 일관되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증여율 25%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ODA로 인정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 또한 현재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공여국들이 ODA 정의를 악용해서 ODA로서의 성격이 크지 않은데 ODA로 둔갑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런 비판에 대해서 ODA 개념을 재정의, 양허성의 조건에 대해 결정하자고 2012 HLM에서 의결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양허성을 재정의하기로 했었음

② ODA 개념 재정의 논의 동향

- ODA 개념 변화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비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정부들이 시행한 ODA 규모와 레벨, 볼륨이 갑자기 너무 바뀌면 숫자놀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
- 공여국의 노력과 수원국의 혜택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post-02015 논의 안에서 어떻게 개발재원을 다양하게 끌어들이 수 있는가에 대한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함
- ODA가 여전히 개발재원의 주요 재원이며 특히 취약국 최빈국, 분쟁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국들에게는 핵심적인 재원임, 이와 함께 ODA외의 다양한 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함
- ODA도 다양한 개발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의 동향임

③ 주요 결과(커뮤니케 합의 내용) (자료집 2p~4p)

(1) 차관 ODA 측정 방식 변경

-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올해 합의하기로 한 양허성 정의와 차관 측정 방식 변경 내용
 - 지금까지 ODA는 캐시플로우로 책정했음(순지출),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차관을 제공하면 차관 제공 금액은 마이너스(-)로 잡혀서 전체 ODA 볼륨이 줄어들게 됨. 이후 돌려받는 금액을 감하는 것이 현재 측정 방안임
 - 이것을 등가로 바꾸는 것이 새롭게 합의한 측정 기준임, 즉 차관으로 제공해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개념으로 잡히는 것으로 측정 기준을 바꿈

	현행	신규 (2018년 ODA부터 적용)
측정 기준	순지출	증여등가액 (grant equivalent) 증여등가액 측정시, 위험조정할인율(상위중소득국 6%, 하위중소득국 7%, 최빈국·기타저소득국 9%)을 소득그룹 별로 차등 적용
ODA 적격 기준	10% 고정할인율 기준 증여율 25% 이상	상위중소득국 10% (할인율 6%), 하위중소득국 15% (할인율 7%), 최빈국·기타저소득국 45% (할인율 9%) 적용 증여율 충족시에도 IMF/WB의 채무 관련 지침 위배 시 ODA 불인정

○ 유상원조 시행국 문제제기

- 현행에서는 유상원조가 0인데, 유상원조 제공하기 위해 공여국도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금리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

○ 증여 등가액 책정

- 상기 유상원조 시행국이 제기한 문제를 반영해서 실제 공여국이 얼마나 노력해서 증여와 마찬가지로 부분이 차관에 있는지를 차관 제공시점에서 뽑아내고 상환액수는 감하지 않고 증여와 다르지 않는 부분을 뽑아냄
- **깊아 나가는 차관이 없어지지 않고 차관을 통해서 이행된 공여국 노력이 인정되는 것임**
- 차관 ODA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번에 바뀐건 차관에 적용하는 것만 바뀜

○ 소득국별 할인율 차등 적용

- 미래에 갚게 될 돈의 현재 가치를 따져 증여율 추산
- 다자개발재원의 양허성과 ODA 개념 재정의 내용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IMF가 시행하고 있는 5%를 기준으로 가져옴
- 공여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차관을 제공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저소득국일수록 공여국이 부담해야 하는 노력을 인정해주고, 위험요소를 반영해서 하위 중소득국 7% 상위 중소득국 6% 최빈국과 저소득국 9%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함
- **대상에 따라 공여국의 노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됨**

○ ODA 적격 기준 강화

- 그동안 저소득국 차관 제공하지 않고 무상원조 중심으로 해왔는데 할인율을 인센티브 부여하는 식이 되면 같은 차관으로 저소득국에 원조를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ODA 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함
- **그룹별로 최소 적격기준 적용하기로 함**
최빈국/저소득국 45% 충족, 하위중소득국 15%, 상위중소득국 10%

○ 결과적으로

- 문제가 됐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유상차관 제공 공여국의 노력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뀜
- 소득이 낮은 국가에 제공하는 것일수록 증여 등가 할인율이 높아지지만 적격기준이 강화됨

- 저소득국 차관이 제공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현장에서 추가)
 -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세계은행과 IMF 채무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ODA로 인정안됨**
 - 채무건정성 악화되면 안 된다는 기준 강화한 반면 유상 공여국 노력도 최대한 반영하게 됨
 - 이 협상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많았으며 DAC 회원국 내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시행하는 국가들이 혼재함에 따라 의견이 매우 다양했음
 - 소위 유사 의사 그룹 내 합의 이루지 못하면 DAC 신뢰도 떨어질 것이라는 부담을 안고 **DAC이 Post-2015 논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반영해서 진행된 논의였음**
 - 그러므로 협상을 도출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는 의지가 내부적으로 있었음
 - 소규모 작업반 논의 여러번 거쳐 현장에서조차 왈가왈부하다가 어렵게 협상이 도출됨
 - 독일의 경우 협상에 동의를 했으나, 내부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
- 적용 시점과 현행 측정 방식과의 관계
-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ODA 실적으로 2019년 측정 시부터 적용예정**
 - 현행 측정 방식으로 측정한 내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투명성을 위해 그동안의 모든 정보가 있어야 뽑아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기존의 측정한 내용을 그대로 가고 발표도 될 것임
 - 향후 보도자료로 접하거나 DAC이 발표하는 대표 통계의 단위로는 증여등가액으로 ODA를 측정하는 것으로 바뀔 것임
 - 국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나가야 할지가 고민하는 부분

(2) TOSD 개념 도입

○ TOSD 개념

- TOSD: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 개발지원
- ODA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폭넓게 측정해야 한다는 논의
- 얼마나 다양한 개발재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수원국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
- Post-2015 의제와 연계가 되어야 하므로 우선 Post-2015 개발목표가 확정이 되어야 함
- Post-2015 개발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를 해야 함
- 그래서 차기 HLM (2015년 말 또는 2016년 1/4분기)에서 결정하기로 함

TOSD 참고자료

◇ TOSD 구성요소(building blocks)

- **(대상 자원)** 공적재원 및 공적행위에 기초한 모든 자원(양허적·비양허적 자원 및 공여국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금융수단 등)을 포괄
 - 공적 노력으로 간접 조성된 자금(flows mobilised by official interventions) 및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예: 보증, 보험)도 측정하되 TOSD 포함 여부는 추후 결정
- **(재원의 성격)**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는 활동(개발에 연관되어 있고 개도국의 수요와 연계된 글로벌 공공재 등)에 투입된 자원 (예 : 기후변화 대응)
 - * FAO, WTO, WHO 등 규범을 수립하는 다자기구에 대한 재정기여, 기후변화로 부터의 보호, 평화 및 안보, 감염성 질병 관리, 국제무역체제 안정화 등 포함 가능
- **(측정 방식)** 총지출된 자금흐름 기준(gross cash-flow basis)으로 계상

◇ TOSD vs. ODA

- TOSD 개념 신설은 ODA 외 개발자원 통계 보고에 있어 투명성과 엄격함을 제고한다는 목표에 기반
- TOSD가 ODA를 대체하지 않으며, TOSD 신설이 간명하고 보충적이며 국제 책무성을 제고하는 통계 체제 마련에 기여
- DAC 회원국 외 공여자들의 공적개발자원 관련 정보 공유 촉진
 - 2015년중 non-DAC 회원국, 개도국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의를 통해 TOSD 정의, 통계 분류 및 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

○ 주요 논의

- TOSD에 ODA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음
- TOSD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음
- TOSD 라는 체제 도입을 찬성하고 폭넓은 개발자원을 측정할 필요 있으나 ODA 순수성 가지고 가야 한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음

(3) 민간금융수단의 ODA 통계 측정 방식

○ 민간금융수단과 운영 현황

- 지분투자, 보증, 보험 등으로 개도국 민간 기업을 공여국이 지원하는 것
-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개발금융기관(DFI) 가지고 있음 (서구 공여국)
- 민간금융수단을 ODA로 보고하는 양태가 질이 낮았다고 함
- DAC 사무국이 보기에 ODA로 인정되어야 할 활동이 있는데 DFI가 활동 보고를 잘 안 해서 ODA로 안 잡히고 있었음
- 통계측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 문제제기 내용

- DFI 공여국들이 DFI에 지원하는 자금, 공여국 정부에서 DFI로 가서 여러 금융 수단 활용 하면 이것이 개도국으로 가서 ODA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
- 실제 운용하는 수단이 개도국으로 갔을 때 ODA로 적합하느냐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동안 너무 복잡해서 DFI들이 보고를 하지 않아왔음
- 민간금융수단이 개도국으로 가는 그 시점에 DFI가 ODA로 잡아달라는 요청

○ 참여한 대립

- 두 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됨
- 그렇게 되면 DFI는 다자기구가 아니라 공여국 내부 기구인데 DFI로 가는 돈을 ODA로 잡는 것이 ODA 정의를 흐리는 것 아니냐?
- 공여국 내에서 사용되는 재원을 ODA로 잡는게 타당하냐? 등등의 여러 의견들 제기
- 이번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결정 내릴 수 없었고 어떤 게 가장 최적으로 ODA로 책정할 수 있는지 2015년에 협의를 해나가기로 함

(4) 최빈개도국 등 특별수요국에 대한 ODA 확대 계획

-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감소하고 있으므로 감소 추세를 역전해야 한다는 정치적 결의

- ▲LDCs에 대한 ODA 지원 감소 추세 역전, ▲동 국가들에 대한 ODA 지원 현황 모니터링, ▲ODA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 및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나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이행, ▲ODA 지원에 있어 다양하게 운용되는 채널·수단·모델리티를 모니터링하여 ODA 효과성 및 품질 제고

(5) 평화 및 안보 활동의 ODA/TOSD 인정 범위

- 평화 및 안보 활동이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
 - 평화 및 안보활동과 개발과의 연관성을 잘 봐야 하는데 조건이기도 하고 전제이기도 함
- 현재 ODA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 협소함
 - 현 DAC 통계 지침을 업데이트 하고 기존의 ODA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ODA로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봐야 하는거 아니냐는 문제제기
 - TOSD안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의견이 분분함
 - 2015년에 의논해나가기로 함

④ 시사점(커뮤니케 합의 내용) (자료집 4p)

(1) DAC 차원

- 측정방식이나 여타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 했으므로 2015년 주요 개발 커뮤니티 회의, (7월 개발재원총회, 9월 Post-2015 유엔 정상회의, 11월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 주요한 회의 관통할 주제로 개발재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번 DAC 합의가 이런 회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보여줌
 - ODA 개념 재정의, TOSD 새로운 개념 도입 등으로 DAC으로서는 개발재원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 문제는 우려하는 개도국, 시민사회가 많으므로 이런 의견들 받아들이면서 확정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2) 우리 정부 차원

- 우리 정부는 2016년-2020 2차 기본계획 수립 시점,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현 정부 유무상 이원화로 집행하고 있는 방식에 DAC HLM 회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나갈 것인지 기재부 고민이 많을 것임
 - 유무상 비율, ODA 증액 계획과 고려해서
 - 지역별 배분 계획 등이 2차 기본계획에 들어갈 것, HLM 결정 사항을 어떻게 국내화 할 것인지 고민해 나가고 실제로 숫자를 돌려봐서 만들어나가야 하는 문제
- LDC, 특별 수원국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결정에 우리 정부도 참여하기로 함
 - 취약국 전략, 예산기반 확대, LDC 지원 확대 계획 등 반영하는 것 여부 수립해나가는 계획 진행하고 있음
- 이번 HLM 결정되지 않은 주요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 취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

- 통계의 순수성과 기존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ODA의 레버리지 효과를 인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 양쪽을 절충해나가는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해나갈 계획임

2) 개발금융 논의 동향 소개

- 문기영 기재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 사무관

(1) MDGs와 Post-2015 비교

o 분야와 참여자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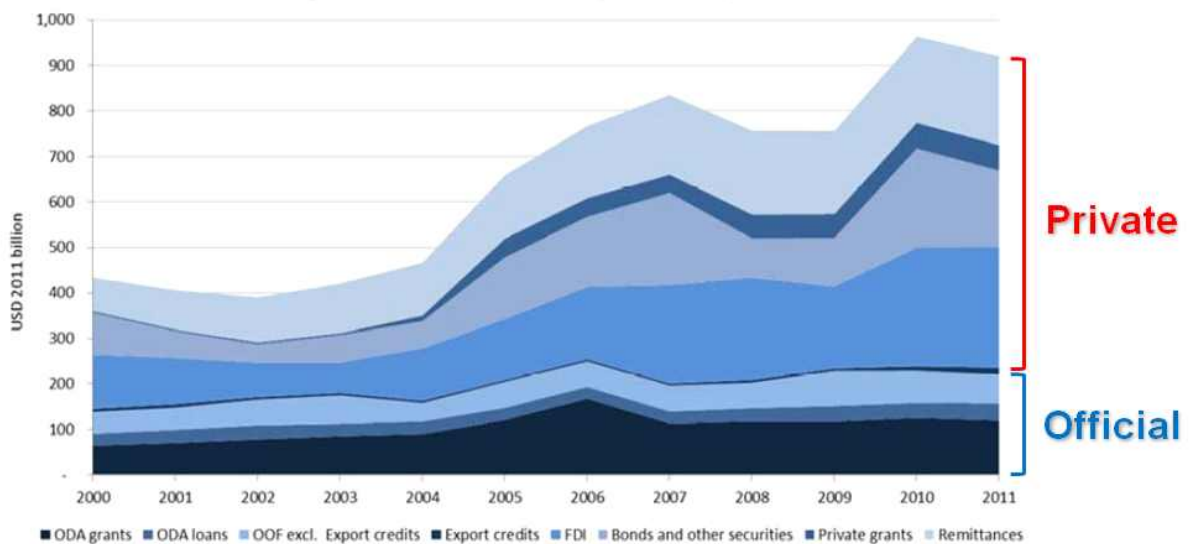
- 환경, 안보, 경제적 측면이 같이 강조되고 있음
- 참여자 차원에서 기존 전통적 공여국, 수원국 뿐만 아니라 신흥공여국,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주요 역할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논의 추세 바뀌고 있음

o Post-2015 근간, 핵심 키워드는 포용성

-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원 필요
- 어떻게 이를 뒷받침할 자원을 마련할 것인가 개발자원 논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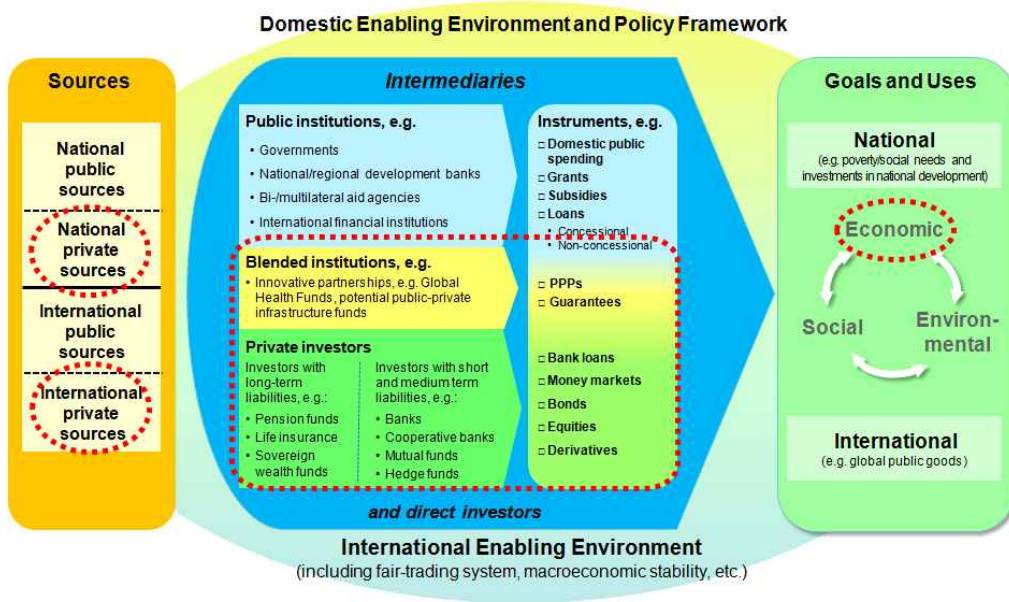
(2) 다양한 개발자원 논의

o 개도국 개발자원 유입 현황



- 2000-2011, 대략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 맨 밑 부분 공적 부분, 이중 일부가 ODA이며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하고 있음
- 양적으로 민간 재원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음(FDI, 송금, 민간기부, 채권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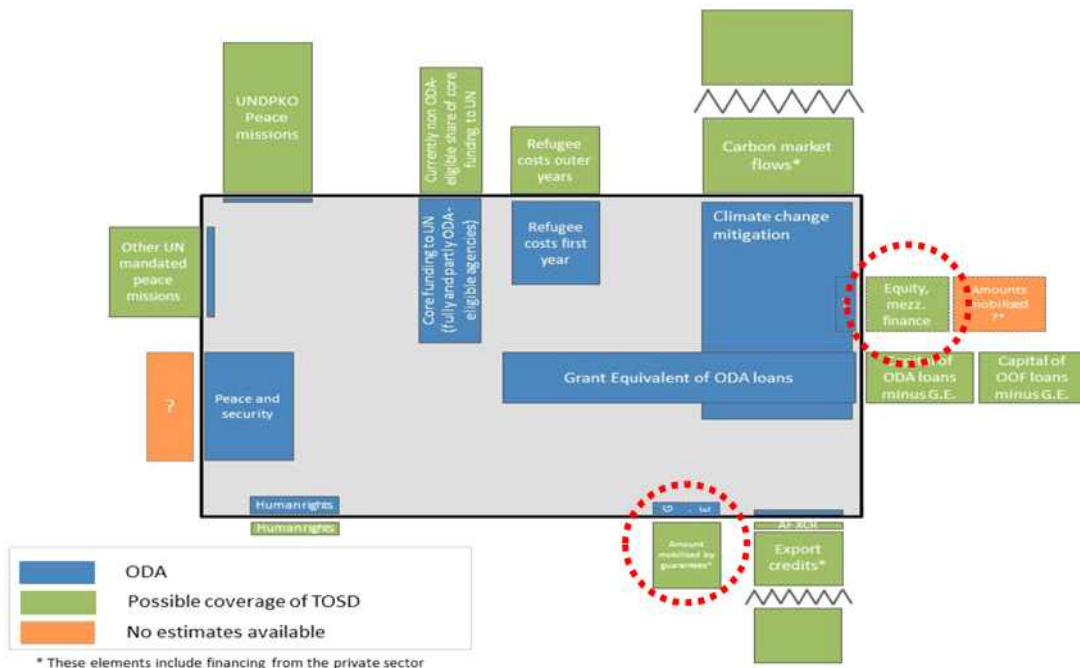
○ UN 내 개발재원 논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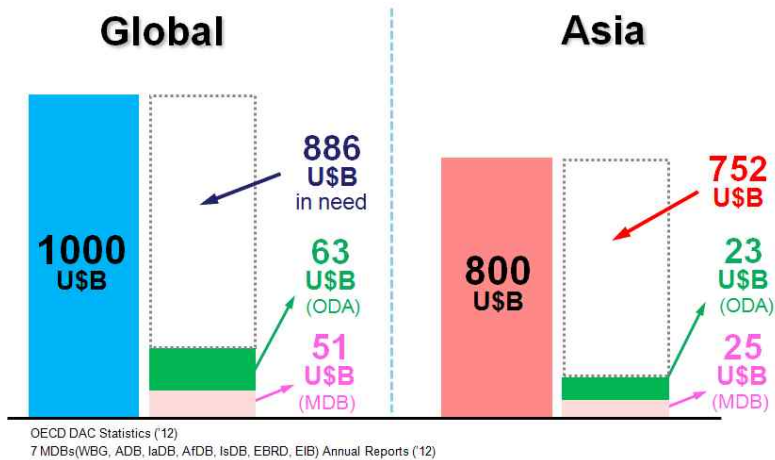
- UN에서 2012 리우 회의 결과문서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재원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발족
- 공적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도 강조하고 있음
- 사회, 환경, 경제정의 측면 함께 강조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민간투자, PPP, 보증, 차관 강조
- 공적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 활용해야 개발재원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OECD 내 개발재원 논의



- DAC이 그동안 ODA 통계관리만 해왔는데 앞으로 TOSD 관리하려고 함
- DAC이 왜 관리를 하려고 하나? 참여자, 분야 확대되었기 때문에
- OECD 내에서도 민간 자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UN과 같이 인식하고 있음

○ 인프라 개발재원의 수요와 공급



- 세계은행과 ADB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개도국 인프라 수요를 연간 1조 달러로 추정
- 실제 1조 달러 수요 충족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1000억 달러 조금 더 되는 수준임
- 8800억불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임
- 8800억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도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에서 공급해야 하는 상황임
- 아시아의 경우 8000억불에 해당하는 인프라 개발수요가 있는데 실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94%, 7500억불에 해당하는 것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개도국은 다양한 인프라 개발 수요,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공여국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모 한계 봉착
- 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조성할 수 있을까

○ 인프라 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

- 세계은행 글로벌 인프라기금 설립 추진 중, 수원국 개발은행과 양자 원조기관, 다자금융기구, 연기금 등과의 파트너십
- NDB(New Development Bank) 500억 달러 초기 자본금 조성, 2016년 가동 목표
- 이런 노력 아무리 해도 1조 달러 해당 개발수요 충족할 수 없는 상황

(3)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

- 개발재원 조성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 대응하려는 추세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ODA 부분에 있어서 우리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더 조성할 수 있을까
 - 국가 예산으로도 해야 하는데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재정여건 어려움
 - 이런 상황에서 ODA 계속 해야 하니 유상 차원에서도, 무상 차원에서도 고민
 - KOICA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게 되면 민간 현대, 삼성 등 기업들의 재원 기부금을 KOICA에 지원하고 KOICA가 수원국에 주면 좋지 않을까 고민해봤으나 KOICA 통한 지원은 가능한데 ODA로 잡히지 않는 단점이 있었음
 - 유상 차원에서는 국제사회 논의 흐름에 대응해서 개발금융을 고민하고 있음

○ 개발금융의 개념

- 개도국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 포괄하는 개념

- 재원조달 측면에서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
-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비상업차관, 보증,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 포함
- 현재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법적 기반 마련되어 있는데 재원 조달 측면에서 논의해옴
- 어떻게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법 개정, 국개위 논의 등을 해왔음

○ 개발금융의 역할

- 기존의 양허성 차관이 EDCF, 금리가 매우 낮음(0.01%)
- 상업금융 부분이 금리는 5~7% 이상 해당
- 여기에 해당하는 지원수단이 그동안 없었음, 재원조달방법도 없었음
-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 만들려고 함

○ 다른 나라 사례

-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 사례
- 독일의 경우 정부 재정과 시장에서 조달한 차입재원을 활용, 고양허성 차관 제공,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양허성차관도 지원하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ODA 하면서 시장재원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개발금융 활용 계획

- 앞으로 우리나라도 ODA 규모가 현재 유무상 2조4천억
- 3조 4조 넘어가게 되면 정부 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움. 복지 수요 등으로.
- 결국은 독일, 프랑스처럼 유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차입재원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임
- 현재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시 지원)과 개발(EDCF, 유상차관 운용을 수은에 위탁) 2가지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음
- 2013년 수은법 개정
- 개정취지는 수출금융과 개발금융을 분리를 해서 새로 대외경제협력계정을 만들었음
- 이 계정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 시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개인들은 신용이 낮지만 수출입은행은 신용이 좋아서 4~5%로 돈을 빌릴 수 있음. 이때 돈 빌리는 출처는 외국, 국내 모두 가능함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고민이 필요함
- 4~5% 빌린 돈으로 개도국에 빌려주게 되면 이것은 ODA가 아니므로 개도국에 빌려줄때는 1%~2%로 빌려주고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빌릴때는 4~5%, 빌릴때는 1~2%
- 손해 보면 제도 운영 안 되므로 빌리는 금리와 빌려주는 금리 차이를 메꿔야함
- 이 금리 차이를 국가 재정으로 메워주게 되면 시장에 있는 돈이 개도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음
-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 EDCF 기금은 부속 요소가 재정
- 다시 말해, EDCF 기금을 통해서 시장 금리 차를 지원하겠다는 것, 이를 구상하고 있음
- 현재 이 관련 법이 기획재정부 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몇몇 의원들이 다른 이유로 반대했었는데 설명하고 설득한 과정에서 최근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 시민사회의 비판과 관련

- 시민사회에서 개발금융 도입되면 유상원조 규모가 확 늘어나서 우리나라 유무상 4:6 비중 깨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것임

- 우리의 고민은 ODA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서 시작된 것임,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Post-2015를 앞두고 전 세계의 고민임

o 개인적인 생각

- 개발금융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돈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가치는 없지만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
- 돈이 너무 풍부한데 그 많은 돈이 잘못,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도 쓰일 수 있지만 개도국 개발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 선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물꼬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음
- 또한, ODA로서의 단순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 통일을 대비했을 때 북한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컨셉이 됨, 우리가 지금부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재원조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함

3) 국제사회 개발재원 논의와 최근 개발금융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민경일 참여연대 실행위원

- o 한국시민사회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 국제시민사회 입장문서(Reality of Aid)를 소개하고 한국시민사회 입장에서의 우려점을 개인적인 소회와 함께 나누고자 함

o 논의 배경

- Post-2015 개발의제 제정과 함께 7월 예정된 UN 개발재원회의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준비 단계
- 개인적으로 MDGs 패러다임 내에서 한국시민사회가 MDGs 목표들과 이행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개발재원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함
- 부산총회 대응하면서 시민사회가 공부 많이 했지만 개발재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follow-up 해오지 못했음. 현재 TOSD 논의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발금융에 대한 논의와 함께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1) 몬테레이 컨센서스

- o 공식명칭: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민간재원 유입 증대, 선진국 재정부담 증가, 냉전종식 이후 원조동기 약화, 9.11사태 등으로 인한 ODA 규모 감소 등이 배경
- UN 밀레니엄선언에 포함된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것, IADGs (2002년 3월)
- 개발재원 이슈가 부각되는 결정적 계기
- UN이 WB, IMF, WTO 등 다른 개발기구들과 협력하게 되는 계기

o 주요 내용

- 국내 자원 동원
- FDI 활용, 국제 무역 활용
- 재정적/기술적 협력(ODA)
- 외채, Systemic 이슈

(2) Doha Declaration

- 2008년 11/29~12/2, 제2차 개발재원 회의
 - 2008년 12월, 미국발 경제위기 반영
 - 몬테레이 컨센서스 재확인, 구성도 유사함
 - 전체 요소 똑 같지만 MDGs 반영
- 주요 내용
 - 개도국 자체 역할 강조
 - 불평등 증대 심화, 여전히 투자를 경험하지 못한 국가들 있음을 지적
 - ODA가 PPP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 자료집 몬테레이와 도하 비교 표 설명

<Domestic Resources>

Monterrey	Do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의 주체는 협력 대상국, 공여국은 개도국이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Good Governance / 적절한 정책과 규범적 프레임워크 / 부패 척결 / 효과적, 효율적,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시스템 / 자국내 투자 / 자국내 금융 시스템 / 중소기업을 위한 Microfinance와 credit / 역량강화를 위한 개도국의 자체 노력 • 이주노동자의 송금 수수료로 인하 언급. 성공사례 교환 위한 South-south & Triangular Cooperation 활성화 명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에 있어 개도국 자체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 •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증대 현상을 지적 • 인권과 성평등, Human Development, 반부패, 아프리카를 향한 도움 등에 대한 강조

<Foreign Direct Investment>

Monterrey	Do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 통한 지식 및 기술 전수, 고용 창출, 생산성 확대,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 강화, 경제성장 통한 빈곤 퇴치에 주안점 • 아프리카 국가들, LDC, LLDC, SIDS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 호소 • PPP의 역할 부각 • 공여국 정부에 민간기업 개발사업 진출 위한 수출신용 및 협조용자 제공, 벤처캐피털 등 자금 대출 수단 발굴, 리스크 보장, 타당성 조사 지원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국제 투자가 Monterrey 이후에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자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국가들이 있음을 지적 • 아프리카 국가들, LDC, LLDC, SIDS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 호소 • 이를 위해 ODA, PPP 등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 • Good Corporate Governance 등을 언급하며 UNGC와 ILO 등으로 합의된 기업의 CSR 적극 참여 호소 •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이 크게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것이 FDI, ODA, 부채 탕감 등을 대체해서는 안 됨을 강조

<International Trade>

Monterrey	Do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의 엔진으로서 강조 • 개도국이 겪고 있는 각종 무역 장벽 열거 (28항). 국제무역 참여 확대 위해 WTO의 도하개발어젠다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어야 함 • UN LDC III(Brussel, 2001)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모든 LDC의 수출품에 대해 Duty-Free and Quota-Free Access 달성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 특히 개도국 사이의 무역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LDCs는 무역 역량의 부족으로 이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 • DDA의 이행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촉구. 여기에 유연성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 • 개도국이 국제 무역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도록 Aid for Trade가 강조됨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Monterrey	Do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는 개발을 위한 다른 자원들, 특히 기업의 직접 투자를 위해 개도국이 매력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보충 역할로 강조되고 있음. 즉, 여기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Private Direct Investment(39). • 이 외에도 교육, 보건, 공공 기반시설, 농업과 농촌 개발, 식량 안보를 위한 ODA의 중요성을 말함. • ODA의 효과성(ODA Effectiveness)을 위해 개도국의 리더십과 개발 계획에 대한 Ownership, 건전한 정책과 굿 거버넌스에 기초를 둔 효과적인 partnership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ODA가 위축된 것을 지적하며, 다시 이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강조 • (Monterrey에서와 마찬가지로) ODA가 여전히 대외적 재정 도움의 가장 큰 부분으로서, 개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언급

Monterrey	Do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의 증가 필요성 강조. LDC III에서 재확인된대로, GNP의 0.7%를 ODA로, 그리고 0.15-0.20%를 LDC에 줄 수 있도록 구체적 노력을 촉구함. 이와 동시에 개도국에게는 ODA가 개발 목표의 Goals and Targets를 성취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함 상기. • 선진국들이 ODA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조화(Harmonizing)를 이루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 ODA, 0.15-0.20% to LDCs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EU가 2010년까지 평균 0.56%, 2015년까지 0.7% ODA를 달성하기로 약속한 것을 격려 • 0.7%의 약속을 위해, 모든 선진국들이 2010년까지는 0.5%를 달성할 것을 촉구 • ECOSOC의 DCF와 HLF의 성과인 Paris Declaration과 AAA 등을 치하. • 원조가 예측가능해지도록 중장기 개발 계획의 정보들을 제공할 것을 촉구 • 변화하는 Aid Architecture 내에서 개발 행위자들의 협력 중요성 강조

<External Debt>

Monterrey	Do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ernal Debt Relief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 • 고채무빈곤국(HIPC) Initiative의 확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HIPC)와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MDRI), Evian Treatment 등에서 언급된 부채 구제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 • 부채 탕감이 ODA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 지적 • MIDC에서의 Debt Sustainability 지원 • 공적차관 외에 Commercial Debt가 늘어나는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도 Data Collection과 Analysis의 필요성 언급

<Systemic Issues>

Monterrey	Do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Economic Governance와 UN의 리더쉽 강조 • IFI, WT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등의 역할 언급 • UN과 WTO의 협력 및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을 위해 ILO 지원 • UN의 조정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과 BWI, WTO과의 협력 증대 필요성 강조 • BWI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 • Regional Development Banks와 IFI와의 협력 강화 • 현재 새롭게 대두된 Global Economic Crisis를 언급하며 빠른 복원력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야 함을 언급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문제

(3)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 최빈국의 빈곤퇴치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자원 마련 요구
 - ODA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 LDCs에는 ODA를 GNP의 0.15~0.20% 까지 제공할 것을 촉구
 - UN 사무총장 보고서 LDC에 대한 지원을 0.15%로 규정, 축소될 우려
 -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부 정부간 협상과정에서 0.15~0.2% 비율까지 LDCs 지원하는 공약 제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 TOSD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 Reality of Aid 입장 문서 소개

- ODA/GNI 0.7% 공약의 전반적 실패를 인정하는 맥락에서의 새로운 시도라는 문제제기
- **ODA 현대화 환영하나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협력대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공정한 기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강조**
- ODA 부채탕감, 난민, 이주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포함되면 안 되며 무상원조 혹은 유상원조 중 증여 부분만 측정되어야 함

○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의견

- **ODA가 여전히 주요 개발재원임으로 ODA는 빈곤퇴치에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함**
- 시장과 연결된 제원은 ODA에 포함되면 안됨
- **평화와 안보 및 군사 분야 지출은 ODA와 분리되어 남아있어야 함**(반테러활동, 정보수집 등) 진정한 ODA 의미 희석될 우려

(5) 최근 개발금융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우려

○ 개발금융 논의하면서 개념상의 혼동

-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몬테레이, 도하와 배경을 두지 않고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 **사회개발대신 경제성장을 앞세우는 것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 독일 사례 활용에 대한 우려

- EDCF가 본받고 싶어 하는 모델, 독일 재건은행(KfW)과 EDCF는 성격이 아예 다름
- 독일경제부흥을 위한, 재건을 위한 은행이며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부흥을 위한 기관이었음
- KfW내에는 독일의 주거 문제와 환경보호문제 자금지원, 중소기업 지원, 개발도상국 개발원조 지원, 개도국 투자 민간기업 대출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KfW를 소개할 때 마치 한국의 EDCF인 것처럼 소개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할 수가 없으며 유효한 비교분석을 할 수 없게 됨. 정확한 소개와 인용을 해야 한다고 봄

○ 대외협력자금과 대외협력기금 혼용의 우려

- 대외협력자금은 ODA인 기금과 달리 시장차입 자금으로서 4~5%대 시장 금리 예상, 그 이상의 고금리로 15년 이하의 단기 대출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개발사업을 지원
- **시장 차입으로 인한 손실 보전과 이차 보전을 EDCF 기금으로 총당한다는 것은 ODA 목적에 쓰여야 할 대외협력기금을 수출금융의 손실 보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ODA라고 볼 수 없음**
- ODA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우려
- 기업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총당하는 것 아닌지 문제제기
- 개발협력 예산과 관련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발금융활성화방안 발표한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데에 있어 진정성이 의심됨
-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한국 기업 살리는 맥락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 여러 우려 존재

-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기재부에서 미리 만들어서 청부법안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은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로 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능 약화 우려
- 증여율 하락으로 인한 원조의 질 저하 우려
- 0.25% ODA 공약 퇴색, DAC 회원국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함
- 최근의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UN의 FfD 흐름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시민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필요함

3. 토론 (진행: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MDGs 이행시 어디서 누가 얼마의 재원을 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음, 몬테레이에서 개발자원 관련 논의를 시작했듯이 2015년 7월에 열릴 아디스아바바 회의 결과에 따라 SDGs가 공허한 국제규범 수사에 그칠지 향후 15년간 탄력을 받을 목표로 존재할지 달려있음. 매우 중요한 이슈임
- 개발자원 논의가 ODA 공적기금이나 시장 재원이나 국내자금이나의 세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핵심 의제는 결국 양허율에 대한 합의가 됐는데, **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른 market linked instrument, market liked, private sector flow 등의 재원이 어느 수준까지 ODA에 포함될 것인가의 문제**, 우리와 직결되는 부분임
- 기존에 Equity, 지분투자, 보증, 보험들이 OOF(Other Official Flow)로 분류됐는데 향후 논의 방향이 TOSD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ODA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 개발금융 문제와 직결됨.
- 평화와 안보 관련해서 향후 이 부분이 ODA에 전반적으로 포함될 것인지? 한국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 개발금융 관련해서 **손실보전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주면 나도 개발금융에 참여하고 싶음) 정부가 개발금융으로 손실보전 총당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개발금융시 risk assessment가 가장 어려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이 그런 경험이 미진한데 risk assessment한다고 할 때 세계은행 등 용역을 줄지 우리가 직접 할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Private sector가 profit 낸다고 하는 사업의 손실보전 논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렵지 않겠는지, 이런 점이 해결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 유상 ODA 관련해서, CGD의 한 학자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자 몇%를 둘 때 ODA로 얼마나 나오느냐, 유상원조가 이자를 0%해도 최빈국으로 한다고 했을 때 ODA에 포함되는 비중이 60%로 나옴, 100%가 안 나옴, 중상위소득국가의 경우 30~40%에 불과하게 ODA로 계산이 되는 시뮬레이션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지? 순지출 접근이 아닌 계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2)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학위를 Development Finance로 뒀는데 매우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사라지고 없다가 다시 부활하여 논의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느낌
- 개발금융 확대를 통해 시장 조달 방식의 ODA를 도입한다는 논리의 논거가 개도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원 중 Non-ODA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Non-ODA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게 FDI와 해외송금임. 이것은 완벽한 private sector임, ODA 영역에 들어올 수 없음**
- SDGs 논의 안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통해 다양한 자원조달 방식 필요성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맞고 다양하게 확대해야 하지만 **약탈적인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배제해야 함**
- TOSD 새로운 개념 도입, 이것은 보완 개념이지 ODA에 대한 대체개념이 아님. 이런 면에서 **ODA를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함**
- 개발금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은행에서 수출금융계정과 개발협력계정을 동시에 가져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export credit임. 이것에 대한 국제사회 규제는 1970, 1980년 대부터 강하게 있었음
 - OECD에서도 export credit에 대한 consensus를 냈으며 가이드라인도 있음
 - WTO에서도 export credit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 이 문제를 OECD DAC개념에서만 보면 상당히 새로운 논의지만 이미 EU, WTO 등에서 일찍부터 문제 있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음
 - EU에서는 export credit을 기업 보조금으로 보고, ODA 자금을 빨아들여서 오염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을 해왔음
 -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음
- export credit을 한국이 추진하는 게 비교우위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 제기
 - 국제사회 신용평가 결과 세계은행은 A+++ 한국수출입은행은 A- 임
 - 국가신용등급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
 - 우리가 돈을 빌려 개도국에 주는 것 보다 세계은행이 주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 아닌가
 - 한국이 비교우위가 없는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가
- 이자액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개도국들이 유상원조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유상을 늘린다는 것은 **국제사회 규범과 트렌드를 거스르는 것임**
- 그 결과는 최빈국 중심 지원 약화될 것이고 중상위, 상위 개발도상국으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음. 우리가 개발금융 조달하더라도 최빈국에는 줄 수가 없음. 이렇게 되면 **원조의 철학과 본질에 어긋날 수밖에 없을 것임**
- 독일과 프랑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하나, 그들은 ODA를 충분히 하고 있고 거기에 더 얹는 것이고 우리는 GNI의 0.16% 불과한데 탄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봄. ODA의 양적 측면 질적 측면 모두 저하될 것임. 남을 해치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을 때 이를 최적화해야 함. 경제학에서 말하는 Pareto Optimization(파레토 최적) 적용, (최적선(最適善)이 찾아진다면 사회구성원이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누군가 이익을 보는 형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 개발금융 들어오면 양은 늘어나나 질과 정책적 측면에서는 Pareto Optimization이 아님. 오히려 악화될 것이며 이 때는 국민적 합의를 대단히 요청받는 사항임
- 제일 첨부터 느끼는 점이 ODA는 보기에 따라서 자선인데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음.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 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서 주는 것은 **ODA의 기본적인 철학에서 벗어난다고 봄**
- 현재 한국 ODA 규모가 0.16%이고 2015년까지 0.25%로 가겠다고 한 부분에서 질을 높일 것이냐 파이를 키울 것이냐의 고민이 있는데, 둘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함
- 개발금융 확대 발상이 기재부에서 나왔는데, 동기 순수성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움. 인류애 실현인지 부처 이기주의 극대화인지 동기 순수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음

3) 이태주 ODA Watch 대표

- 오늘의 논의는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임
 - RoA에서 이미 10여년전에 ODA 계상 문제 지적, **팬텀 Aid Vs Real Aid 개념** 사용
 - 현재 ODA 계상 되는 금액 중 60% 가 자국으로 환류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개도국에 들어가는 돈이 40% 에 불과함.
- 국제시민사회는 실제로 개도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Real aid로 보고, Real aid로 ODA 계상 하자고 주장함
 - 자국내 유학생 초청 프로그램, 난민 지원 프로그램 등은 ODA로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일본이 대표적인 나쁜 사례, 채무 탕감한 것을 ODA로 이중 계상, 부채 탕감 부분은 ODA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
- 이런 문제제기 오래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개념을 재정의 하겠다는 것이 이상함. ODA를 modernized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 유럽 국가들 스스로가 그동안 전통적인 원조 카르텔을 형성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임. 독점적인 스스로의 규범으로 ODA 개념을 한번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통계 보고 하면서 Non-DAC 재원의 흐름을 계산도 해내지 못하고 기준도 없고 명확하지 않다보니 **DAC의 명분과 전문성, 효율성이 깨지고 DAC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맥락으로 이해함**
- 현재 **국제개발협력판의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함**. 선진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개발재원 안내놓고 있음. DAC 회원국은 1500억불에서 경제상태임. SDGs 기후변화재원, 평화 안보 이슈 등 새롭게 추가되면서 추가 자금들이 **ODA 외의 Additional Separate 재원으로** 하자는 국제시민사회 요구가 있는데 이를 희석시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 더 중요한 본질은 차관의 본질이 무엇인지, **공여국이 왜 자꾸 차관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함**. ODA 투명성과 부패문제 연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차관임
- 기재부에서는 차관이야말로 개도국 오너십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저변엔 무엇이 있을까. 돈을 개도국에 100% 준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돈을 차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차관의 조건이 있고 tied aid 면에서도 오히려 충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음

- 한국 기업의 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손실 보전, 리스크 보전을 해주게 된다면 **한국 차관 원조의 솔직한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 7~80%가 한국 대기업일 것임. 대기업들을 위한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 명확한 것임. 이런 이야기 안하고 순수하게 개도국 오히려 존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현실을 가리는 것
- 차관 프로그램은 정보 공개도 안 되고 과정이 불투명함. 부정부패 연루될 가능성 높음.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차관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 현재 논의되고 있는 TOSD 개념 도입, ODA 측정 방식 변경 등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ODA 계상 방식이 바뀌면 한국 ODA 양이 늘어나는가? 시뮬레이션 결과는 무엇인지, 유무상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명백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말해야 함
- 2015년에 원조 배분 계획,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수립 등이 진행될 텐데 이때 개발금융 논의와 DAC HLM 논의 결과가 한국 ODA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4. 발표자/토론자 추가 발언 (진행: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 이소리 사무관

- TOSD ODA, OOF의 차이는 불명확함, TOSD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개념 도입에만 합의했음. 범위는 2015년에 정해 나갈 텐데 애초에 사무국이 말했을 때는 OOF 중에서도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수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반응 있었음. 그래서 ODA와 OOF를 더한 것이 바로 TOSD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임
- TOSD가 민간의 재원을 중요하게 본다는 말(기재부 사무관 발언)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TOSD는 official support 이므로 정부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민간 재원이 다 들어오는 것 아님
- 그 중 몇몇 공여국은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민간에서 동원된 재원을 TOSD에 넣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있음
- 우리 정부는 그건 아니라고 말함. official support임으로 민간 재원은 민간으로 봐야 하며, 단, 측정할 때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민간이 안심하고 개발지원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인정해야지 TOSD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 표명해옴
- 보증이나 지분투자 등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ODA 통계 재정립 부분은 차관에 해당하는 부분만 논의됨. ODA Loan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차관이 ODA로 어떻게 인정될 것이냐 이야기였지 지분투자나 보증에 대한 것은 없었음

- 몇몇 나라는 지분투자나 보증도 ODA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한 나라 있고 이를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 나라도 있었고, 확정은 되지 않음
- DFI 민간금융수단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활동을 어떻게 ODA로 인정하느냐의 부분이 보증과 지분투자 관련, DFI 관련 활동이 보증이나 지분투자, 보험 등 DFI에 대한 공여국의 자본 지원을 ODA로 인정하면 개도국 민간 기업에 공여국이 지분투자 하는 것은 ODA로 인정하는 것임
- 아직 이것들을 어떻게 ODA로 볼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음. Equity나 Guarantee를 TOSD로 볼 것인지는 전혀 결정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입장 많음. 의견이 분분함
- 평화, 안보 ODA 포함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현재 지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이야기해옴.** 그 이후에 ODA로 추가로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현재 DAC ODA 통계지침에 대한 회원국 이해가 상이함. 같은 이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가 더 들어갈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지침을 명확히 하자는 입장임
- **평화 안보 관련 활동을 ODA에 넣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지금까지 정부는 반대에 가까운 입장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UN PKO 많은 기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DAC이 UN PKO 중 7% 계수 적용, 이를 ODA로 인정하고 있음. 7% 배경은 UN에서 승인한 PKO 예산을 다 본 것이 아니라 상위 3개 큰 활동 봐서 그 중에서 몇 퍼센트냐 뽑아낸 것임.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UN DPKO 담당국 용역 보고서를 보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 그 해의 모든 활동을 봐서 그 중에서 개발과 긴밀히 연결이 있어서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임. 기존의 7% 계수 적용은 실질적 개발 기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
- 평화 안보 분야에 많이 활동하는 나라들은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협의가 어려우므로 태스크팀에서 하나씩 제안하고 있고 논의는 내년에 이루어질 거고 하나씩 내는 활동들에 대해 찬/반 의견 주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개인적으로 어떤 나라는 군인연금 내는 것도 ODA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기가 하는 활동을 부풀리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 있음. 면밀하게 살펴봐야 함
- 평화 안보는 개발협력국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담당국에 의견을 묻고 있음. 외교부 내에서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국방부와도 협의가 필요함. 정부의 조율된 입장으로 내년에 협의를 해나가야 함

2) 문기영 사무관

- 전반적으로 **개발금융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느껴짐.** 오해의 바탕에는 정보를 많이 공유하지 못했던 기재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시장에서 조달하는 재원에 대한 손실보전의 의미가 무엇이나, **민간 기업이 손실을 봤을 때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님**. 시장 재원을 조달해서 시장재원이 개도국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2차 보전과 손실 보전을 해줘야겠다는 차원, 이때의 손실은 사업 수행하는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가 망했을 때 우리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하는데 베트남정부가 갚을 수 없을 때 이것을 손실이라고 표현함
- 현재 ODA에 있어서 그런 손실이 있느냐, 현 ODA 채권은 일부 재정상황이 안 좋고 부채 상황이 안 좋은 나라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만 해주고 있음. 우리가 상환 받아야 하는 총 금액의 이자를 몇 년간 보류하고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음. 그 부분의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음. 87년부터 EDCF 이행하고 있고, 4조 규모인데 현재 기간연장하고 있는 대상이 400억 정도. 0.1%에 불과함. 그리 크지 않음
- **기업 손실 보전이 아니라 우리 시장재원이 베트남에게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임**. 왜 필요하느냐? 이것을 정부 재정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누군가는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기능을 수은이 하는 것으로 택한 것임. 그 기능은 굳이 수은이 아니어도 됨. 상업은행이 되어도 되고 농협을 지정해도 됨. EDCF를 위탁 운용하고 있는 수은이 해외 채권을 다루고 있고 수은 신용도가 국가 신용도와 같으므로 외국에서 수은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같은 등급이므로 싼 금리로 적용 가능함. **수은은 단순한 자금 조달 통로임**
- 또 하나의 오해, 수출금융과 같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닌 것임
수출금융은 삼성, 현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 공장 지을 때 돈 빌려주는 것. 우리 ODA 사업은 분야도 다르고,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수원국 정부이지 기업이 아님
- 개발금융 도입하게 되면 EDCF인 고양허성차관과 수원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출금융과의 연결고리는 될 수 있지만 수출금융은 아님. 그렇기 때문에 수은이 현재 수출금융도 하고 있고 ODA도 하고 있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단절시키기 위해 계정을 다르게 만들었음. 돈주머니를 분리시킨 것임
- 개발금융을 하게 되면 ODA 품질 저하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 ODA 예산을 늘리려면 재정 여건상 정말 쉽지 않음. 예를 들어 GNI 대비 0.25% 달성하려고 하면 4조원 이상 필요한데 재정에서는 4조원 조달이 매우 힘들. 빌려서 하지 말고 있는 돈으로 하라고 하면 지금 수준에 불과함. 이게 맞는 건지 빌려서라도 ODA를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이 고민해야 할 듯.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 더 많은 돈을 수원국에 조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 하고 있음**
- EDCF, 유상 ODA 빌려주는 금리 0.01~0.25% 정도이며 전세계 공여국에서 가장 싼 금리임. 최빈국부터 하위중소득국(필리핀, 베트남 등)에 비슷한 조건으로 주고 있음. 차별화 안되고 있음. 최빈국에는 EDCF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조건이 좋음. OECD DAC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도 조건이 좋은 양허성 차관을 최빈국에 지원하라는 것임. 이 부분에서 EDCF가 많이 지원하고 개발금융은 금리가 그것보다 높으므로 중소득국 위주로 지원하려고 함

- 이렇게 차별화 하게 되면 유상 ODA 품질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함. 현 OECD 논의 결과 반영하면, 쉽게 말하면 금리 4.5% 이하로 빌려주게 되면 ODA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임. EDCF는 0.01%임. 그 사이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 열어놓자는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임

(진행멘트) 이성훈 이사

- 오늘의 논의가 Financing for Development와 Development Finance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재원과 금융의 차이 혼란스러우나 오늘이 개발금융 논의에 대해 처음으로 대화하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공개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뜻 깊다고 생각함.

3) 민경일 실행위원

- 개발금융 거래에 있어서 개발 사업의 리스크와 이차보전/손실보전을 대외협력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에서 큰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위법이 될 수 있음. 수은법 37조,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한 보전은 정부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기금과 혼용될 수 있음. 지금 개발금융은 EDCF 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므로 위법이 될 수 있음
- ODA 규모 확대 측면에서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했는데, 법인세, 누진세 늘리면 되는데 늘리지 않고 다른 세금 걷지 않아서 재원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음

(진행멘트) 이성훈 이사

- ODA 규모 GNI 대비 0.25% 공약이 없으면 이런 논의가 역사적으로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인지, 규모를 늘리기 위해 나름 기재부에서 묘책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을텐데. 중도적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기업이 세금을 더 내면 되는데 이런 자금들이 ODA로 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개발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개발금융의 방식에 대해서 시민사회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음

4) 황원규 교수

- 기재부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개발금융에 대해서 수출금융과 다르다 하는데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개발재정 전공자의 양심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 자금 조달해서 포괄적으로 르완다 정부에 지원한다고 하면 다름.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고 프로젝트로 나가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대부분 한국 기업이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아무래도 수출금융과 유관함. 개발금융이 아니라 수출금융형 개발재원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발표해야 정직한 것이 아닌지. 질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음
- 유상원조가 늘어날 것이고 고양허성 차관으로 금리가 0.01%에서 4~5%로 올라가는데 이 자체가 질 저하로 볼 수 있음. 현재의 재정 여건상 0.25% 달성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재부 의견이라고 하면 위기의식 조장하는 것임
- ODA 0.25% 하겠다고 한 것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임, 국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의 여건상 안된다는 것을 예산당국에서 전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국제사회는 GNI 대비 0.7%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안하고 딴 것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림

5) 이태주 교수

- 일부 재원의 어려움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DJ정부, 노무현 정부가 ODA 재원 늘리기 어려움을 대북문제로 핑계 댔음. 현 정부는 대북문제도 언급 안하면서 ODA도 늘리지 않고 있음. 독일이 통독과정에서 매년 10억 이상을 동독에 지원한 것처럼 우리정부가 무상으로 대북 지원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용인이 될 것임. 우리가 이런 이유로 북한 지분 포함하면 0.3% 정도는 될 것임. 북한 지원 안하면서 ODA도 늘리지 않는 것은 매우 인색한 정부임.
- **배분의 문제가 중요함.**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개발금융 정책은 최빈국 중심이 아니라 중상위소득국(UMIC)으로 파트너로 옮겨가겠다는 의지로 보임
- ODA 재원 늘리자고 할 때 국익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 누구의 국익이냐. **대기업이 가져가는 국익**이라고 할 수 있음. 불평등, 소득 격차 심해지고 있는 한국사회 돌아보면 국제사회 원조도 **우리기업 키워주기**로 가고 있음. 경제개발과 개발원조를 명확히 구분 짓는 논의부터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함. 매우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임

5. 청중질문 (진행: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 김용빈 개발마케팅연구소장

- 수출금융과 EDCF 이용해서 수십개 개발사업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오해가 있다는 것 아시움. 손실보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 개발금융은 기업의 손실 보전 차원 문제가 아님. **이 자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수원국 정부, 고객의 목소리라고** 생각함.
- 실제 개발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원국 정부가 이자율이 조금 더 높더라도 풍부한 자금이 들어와서 고용 창출하는 사업 하는게 중요하냐, 학교, 보건소 등 무상자금으로 받아서 해야 하느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수원국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의 협의에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2) 신재은 KCOC 부장

-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 중 하나로 수출입은행 문건에서 보면 이것의 목적이 대기업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로 정부가 말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문건과 말씀하시는 것이 다름

3) 조이슬 시민

- 오늘 나온 논의에서 개발금융 개념 자체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음. 한국 개발원조에 개발금융이라는 개념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빈약했다고 생각함. **개념의 공론화가 부족했음.** 이미 해당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만큼 추진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아쉬움

- 또 기재부측의 설명에서 개발금융 도입의 정당성을 GNI 대비 0.25%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에 국한해서 설명하는 것이 납세자로서 아쉬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개발금융이 수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면 납득에 도움이 될 것임**

4)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간사

- 기재부에서 현재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 ODA를 늘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원조 금액 1년에 2조 규모이며, 자원외교 손실금액만 잡아도 43조에 달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불할 손실액이 31조가 남은 상황에서 원조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원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개발금융 관련 EURODAD와 같은, 유럽 NGO들은 저금리 상태가 이미 오래되고 있고 중간 10% 할인을 때문에 공여국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개발원조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자를 더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상정한 국개위 자료에 의하면 마치 개발금융을 하는게 비싼 이자로 해서 싼 이자를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싼 이자를 가지고 와서 비싼 이자로 준다는 것임. 우리나라는 싼 이자로 주기 위해 ODA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원조정부가 공개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누가 이득으로 취할지 확인할 수 없음
- 기재부의 경우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 해외 활동 활발해질 결과를 낼 텐데,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이 세이프가드를 만들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개발금융 법안 제정하는 것보다 세이프가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관리감독 준비하는 것이 더 빨리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개발금융 법제부터 하기보다 세이프가드를 구속력 있는 체제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함**
- 평화 안보 분야 ODA 인정 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방부, 비분쟁지역 파견을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합법화하기 위해 법 제정이 진행 중임(송영근 의원) 해외긴급구호활동에 군대 파병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입법 노력하고 있음. 지금은 국방비로 나갔지만 ODA로 포함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짐. 긴급구호법률에 따라 정부 주도의 긴급구호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군대를 파견하기로 하는 것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것. 2015년도 예산안 사회복지 관련 예산 44조밖에 늘리지 않음. 국방비 35조임. **전세계적으로 국방비 많은데 파병 늘리고 군대 통한 ODA까지 하게 되면 국방비 계속 늘어날 것임.** 국방부와 협의할 때 외교부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서 대응해주길 바람

5) 홍문숙 ReDI 연구실장

- 외교부에서는 현 개발금융 논의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전체 ODA를 어떻게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무상원조 확대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함. 오늘의 이야기는 개발금융 대응 방안에 불과한 것 같고 **무상원조 확대 전략이 함께 나와야 논의가 균형을 이룰 텐데 무상원조 확대 전략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

(진행멘트) 이성훈 이사

- 오늘 토론회는 KoFID 원조투명성 분과에서 주관한 것으로 투명성이라는 원칙과 관점으로 살펴보자는 것임. 0.25%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2주전에 국무조정실과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국조실 차관이 0.25%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했음.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놓고, 오늘은 개발금융과 TOSD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음

6. 발표자 추가 답변

1) 문기영 사무관

- 개발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음. **협력대상국 중 베트남의 사례**를 들면, **금리가 조금 더 높는데 더 많은 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해 베트남은 반응이 매우 좋음**. 수원국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7~10% 금리 줘야 하는데 EDCF를 통해서, 유상차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더 큰 규모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 협조를 부탁해옴
- 최근 베트남이 호치민과 하노이 구간 메트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사업 한 건당 20억 불에 달하는 규모임.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없는 요건임을 알고 이런 사업 제안을 하지 않는 상황임. 세계은행이나 JICA 등에 요청해왔음. 그런데 이제 한국도 민간을 활용해 더 많은 재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 제안까지 들어오고 있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수원국에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됨

2) 이소리 사무관

- 오늘 토론회에서 잘못된 논의를 자체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함. 우리는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이야기하는데 **“개발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은행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언어 사용 잘못되고 있음.** 개발재원이라는 뜻이 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금융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오해 여지가 커짐. **잘못된 용어를 우리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 파이낸스를 금융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함. 금융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것이지 금융을 활용하는 재정지원 방식을 트렌드로 보는 것은 위험함. 많은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님. 그 부분에서 용어에 대한 오해 풀고 싶음
- 기재부 문사무관의 발표에서, 민간 자원 중요성 강조한 것에 공감하지만 **ODA가 민간 자원 조성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지 민간 재원을 ODA에 편입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님.** 민간 재원을 ODA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해야 함. 민간 자원은 이미 활발해지고 있고 민간 기부나 민간 노력이 매우 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임
- 민간 재원을 정부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는 기재부가 말하고 있는 **“개발금융”을 ‘저양허성차관’ 도입 방식**으로 보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ODA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음.** 우리가 모두 합의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음. 합의 없이 도입 여부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이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ODA를 어떻게 하나갈 것인지와 매우 상관이 깊음
- 외교부 입장의 코멘트로 하진 않았지만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현재 유상원조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움.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채무건전성 문제 무시하고 유상원조를 하는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무상원조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믿음 있음.** 이는 **정치적 결정 없이 바뀌기 힘든 사안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도 힘든 상황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무상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와 유상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따져**

야 할 것이며 재원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쓰여야 적절한지 등 배분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함

- 현재 유상원조 측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무상원조와 다를 바 없는 사업도 있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함. 새로운 “저양허성 차관” 도입하면 최빈국에 EDCF가 가고, 나머지는 중소득국으로 몰릴 텐데 최빈국에 EDCF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틀 안에서 배분하다 보니 최빈국으로 EDCF가 가는 것 자체가 외교부 입장에서는 과연 값을 능력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예상되는 나라에 차관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는 정부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
- 현 재원을 각각 효과성 진단이나 어느 곳 어느 분야에 해당 재원이 지원됐을 때 최적화된 ODA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최빈국에 대한 차관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것임
- EDCF가 현재 채무상환 불이행은 없고 상환 기간 재조정만 있다고 했지만 87년에 시작해서 20년~30년 상환기간 가지고 있으니 아직은 모르는 일임. 채무 상환 기간 재조정하는 것은 약속한대로 갚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금리가 더 높은 차관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재원 늘리는 차원에서 기회를 붙잡고 싶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접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해 외교부에서 알고 있고 협의 하고 있음. 현재 외교부가 해외긴급구호 주관하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 군이 인도적 지원 하면 ODA로 인정되고 있음. ODA 아닌 것인 ODA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순전히 인도적 지원 활동하게 되면 군인이 받는 월급 등 제하고 수송비, 물자 등은 이미 ODA로 인정되고 있음. 시민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지 들었으니 협력국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외교부 입장에서 인도적 지원에 있어 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현재도 수송의 역할만 하고 있음.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물자 지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7. 마무리: 이성훈 이사

- 주제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관심이 높아서 열띤 논의가 이어짐. 올해의 사자성어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함, 오늘 다양한 개념들이 난무했는데 개념 정리를 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음. 상호간 오해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는 왜 오해 하냐고 접근하기보다 투명성과 정보 공개 부족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미 정부에서는 한참 논의가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원초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의 단면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불편한 자리에 나와준 정부에 고마움을 전하며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오해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음. 단,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불평등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